

세계경제 리스크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과 대응: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김규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장 (keiokim@kiep.go.kr, Tel: 044-414-1017)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shkim@kiep.go.kr, Tel: 044-414-1035)

이정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leeje@kiep.go.kr, Tel: 044-414-1236)

손원주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wjson@kiep.go.kr, Tel: 044-414-1287)

김지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kimjs@kiep.go.kr, Tel: 044-414-1228)

차 례

1. 논의 배경: 세계경제 리스크
2. 미·중 통상마찰
3. 브렉시트
4. 금융긴축
5. 중국경제 성장둔화
6.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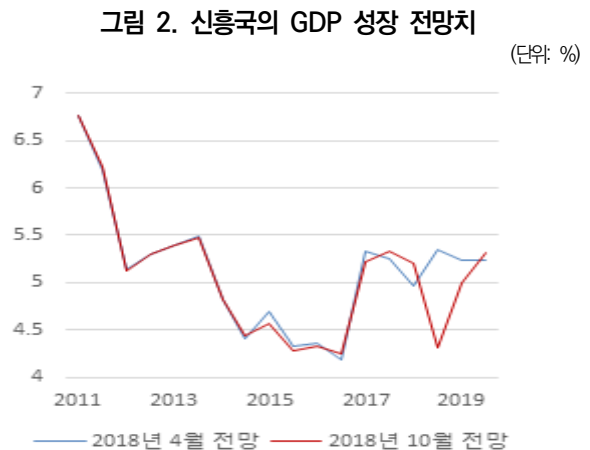
주요 내용

- ▶ [미·중 통상마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심화 및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미·중 간 통상협상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일본] 현재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제한적이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정보통신기기 등 일부 분야에서 GVC를 통한 대미 부품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
 - [대만] 대만정부는 '미·중 통상마찰 대응소조'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였고, 중국에 진출한 자국기업의 본국 회귀를 위해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투자 장려 행동방안'을 발표·시행 중
- ▶ [브렉시트] 브렉시트 기한 연기 및 영국 내부의 반(反)브렉시트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브렉시트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영국, 유럽 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됨
 - [일본] 일본정부는 영국에 진출한 자국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영국과 FTA 및 상호승인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영국 주재 일부 일본계 기업들은 생산 거점의 이전, 사업 계획 수정에 돌입
- ▶ [금융긴축] 2018년 미국 FRB의 기준금리 인상과 ECB의 양적완화 중단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금융긴축이 진행되었으나, 2019년 들어서는 경제지표 악화 및 불확실성 증대로 일시 중단 상태
 - [일본] 일본은행은 미국 FRB의 금융긴축 중단 및 금리동결이 미·일 간 장기금리 격차 축소 및 엔화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
- ▶ [중국경제 성장둔화]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중국의 수출 감소, 내수 위축, 정부·가계·기업 부채의 지속적 증가, 중국정부의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인한 자본 유동성 축소 등이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
 - [일본] 일본정부는 대방면(통상, 부채 포함)으로 중국경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중국 관련 사업 축소를 검토 중임.
 - [대만] 대만정부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와 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국 기업·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시장다원화 정책 등을 추진 중임.
- ▶ [시사점] 첫째, 미·중 통상마찰은 직접적으로 대중(對中) 수출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정부의 내수진작 및 시장개방 정책에 따른 기회인도 존재할 것이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둘째,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한·영 FTA, 상호승인협정 등 우리 기업의 대영(對英) 무역·투자 환경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외환부문 건전성 강화조치를 점검하며, 넷째, 중국경제 성장둔화에 대비한 대중(對中) 투자전략 재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음.

1. 논의 배경: 세계경제 리스크

■ IMF 라가르드 총재는 2019년 2월 세계정부정상회의(World Government Summit)에서 ① 미·중 통상마찰 ② 브렉시트 ③ 금융긴축 ④ 중국경제 성장둔화를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4대 먹구름’이라고 거론하며 위 요소들이 악화될 시 글로벌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수 있음을 경고

- IMF는 2019년 1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0.2%p 하향조정한 3.5%로 발표했으며, 이것은 독일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등의 국가별 요인과 금융시장 심리 악화로 2018년도 경제 모멘텀 약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힘.¹⁾
- IMF는 2018년 10월 세계경제 전망 당시, 기존 대비 0.2%p 하향 조정한 3.7%로 발표했으며 주요 리스크로 ① 통상 마찰 및 정책적 불확실성 ② 금융긴축 ③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및 국내 분쟁 등을 지적²⁾



자료: IMF(October 2018), WEO data.

■ IMF는 수정전망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 구축 등의 무역 관련 협력, 금융 규제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 등 경제통합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³⁾

- 미·중 통상마찰 및 노딜 브렉시트, 중국 경기둔화 등이 세계경제의 리스크로 남아 있는 만큼 무역장벽 강화로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보다 국기간 협력으로 정책적 불확실성 및 무역의 불협화음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힘.
- 각 국가별 정책마련에 있어 선진국은 △ 생산성 향상 △ 노동시장 참여 제고 △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 재정 완충 여력 보강이 필요하며 신흥개도국은 △ 거시건전성 체계 강화 △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 지속 가능한 부채비율을 보장하는 재정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고

1) IMF(2019),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 IMF(2018),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s.

3) IMF(2019),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 미·중 통상마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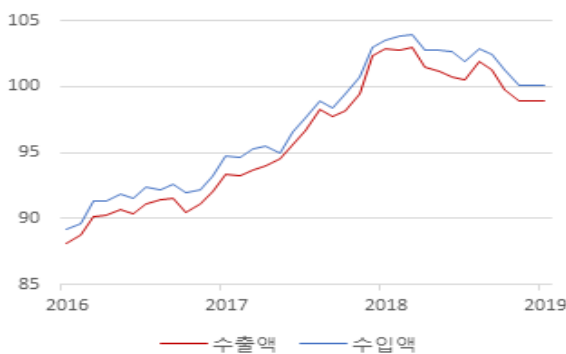
가. 개요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로 국가간 통상 분쟁이 장기화, 상시화되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 강화로 무역긴장이 발생함에 따라 세계 교역 감소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그림 3 참고)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 국가안보 위협, 불공정 무역관행을 명분으로 일방적 보복 조치가 가능한 자국 통상법을 이용하여 특히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 강화⁴⁾
- 미국은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대중 수출액 30억 달러 수준인 128개 품목의 수입품에 추가관세⁵⁾ 부과
- 2018년 6월 미국은 301조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1차 중국 수입품 818종(340억 달러 규모)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 등 545개 품목(340억 달러 규모)에 2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중 통상마찰이 본격화
- 2018년 8월 미국이 2차적으로 279개 품목(160억 달러 규모)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2차 리스트 333개 품목(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관세 부과
- 2018년 9월 3차 2,000억 달러 규모로 연말까지 10% 관세 부과 발표,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 5~10% 관세 부과로 대응

그림 3. 세계 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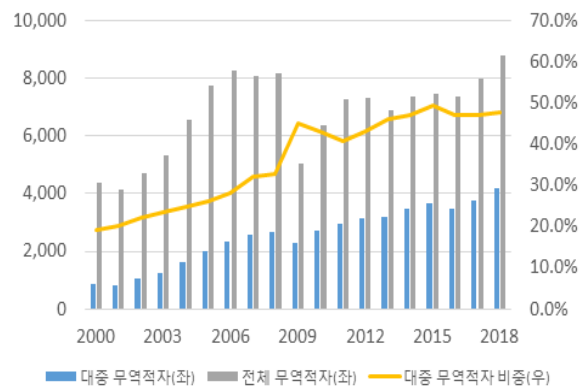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8. 3. 22).

그림 4.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



자료: 미국 통계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

■ 미·중 협상 개시 및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양국간 갈등이 일시적으로 진정되었으나, 협상이 단기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한 우려 확산

4) 미·중 간 상호관세 부과 추진 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꽃비 외(2018. 9. 20),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 301조에 따른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8-35 참고

5) 1차로 미국의 대중 수출액 9억 8,000만 달러 수준의 120개 품목(건조과일, 견과류 등)에 15% 관세가 부과됐으며, 약 20억 달러 수준의 2차 8개 품목(돼지고기 및 가공식품, 재생 알루미늄 등)에 25% 관세를 부과.

- 2018년 11월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 계획을 90일 연기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함에 따라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
 - 현재 미·중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국의 협상팀은 4월 협상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힘.
- 미·중 통상마찰은 단순한 무역수지 불균형에 의한 갈등이 아니라 국영기업 및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전쟁이며, 자국에 우호적인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미·중 양국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미국의 요구 중 상당 부분이 중국의 핵심 성장전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2001년) 이후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빠르게 증가함을 전제(2000년 -838억 달러 → 2017년 -3,752억 달러)⁶⁾(그림 4 참고)
- 미국과 중국의 2017년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19조 3,621억 달러, 11조 9,375억 달러 수준으로 두 나라가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중 통상마찰이 가져올 교역 감소와 이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 및 세계경제의 충격에 대한 우려 확산
 - IMF는 통상 갈등의 확산 및 이에 따른 투자부진, 신용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2020년 세계 GDP가 0.8%p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으며 장기적으로 0.4%p 하락할 것으로 전망⁷⁾

나. 일본에 대한 영향

■ 미·중 통상마찰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거나, 분쟁이 장기화되어 미·중 양국간 수출이 감소할 경우 GVC를 통한 직접적인 수출 피해와 내수 침체 등이 예상됨.

- 현재 미·중 통상마찰의 타격은 주로 미·중 두 나라에 집중되어 있음.
 - IMF는 미국이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2020년에 중국의 성장률은 0.9%p, 미국은 0.3%p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일본은 0.01%p 상승할 것으로 추산⁸⁾
 - UNCTAD 보고서는 일본이 미·중 관세전쟁에 따른 무역 대체효과로 200억 달러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하였음⁹⁾
 - 다만 중국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미·중 통상마찰이 격화되어 중국의 수출량이 감소하는 경우 일본의 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할 것임¹⁰⁾
 - 미국 수출에서 각국이 가지는 부가가치 규모(각국의 GDP 대비)를 살펴보면, 캐나다·멕시코 등 NAFTA 국가는 비교적 높은 반면, EU·일본은 0.2~0.3%로 낮아 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에도 GVC를 통한 영향이 제한적임(그림 5 참고).
 - 반면, 중국 수출의 경우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가가치 규모(GDP 대비)가 크며, 일본은 0.8%로 미국 및 EU보다 크게 나타남(그림 6 참고).
- * 중국의 수출액 2조 달러 중 중국 외 국가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약 3,700억 달러(19%)로, 그중 일본의 기여도는 1.8%인 약 346억 달러임. 이는 일본 연간 수출액의 약 5%에 해당¹¹⁾

6) 미국 통계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 자료

7) IMF(2018),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s*. (October)

8) EU의 경우 0.04%p 상승. 日本經濟新聞電子版(2019), 「中国の対米輸出, 日本が付加価値 総額で3.8兆円貢献」. (2月25日)

9) The Japan Times(2019), "Japan and EU could gain while U.S. and China feel the pain in trade war, says U.N. report." (Feb. 5)

10) 内閣府, 「中国輸出の高度化と米中貿易摩擦」, pp. 90~96. 본 내각부 보고서에서는 미·중 통상마찰로 미국·중국의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각국이 받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 및 중국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액을 각국 GDP 대비 살펴보았음(그림 5, 그림 6 참고). 여기서 부가가치는, 해당 국가에서 최종재로서 수출되는 부가가치와 중간재로서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타국에서 수출되는 부가가치를 포함함.

그림 5. 미국 수출에서 각국·지역의 부가가치 규모(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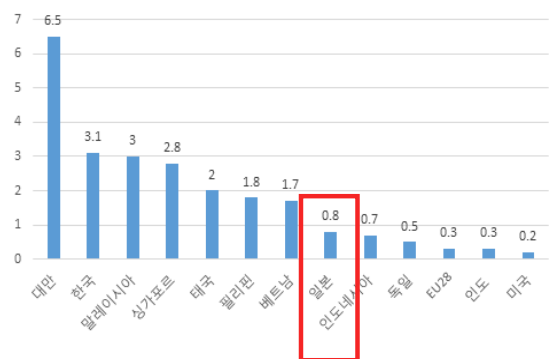
(단위: %)



주: 자료 출처는 OECD-WTO TiVA Database.
자료: 内閣府, 「中国輸出の高度化と米中貿易摩擦」, 재인용.

그림 6. 중국 수출에서 각국·지역의 부가가치 규모(GDP 대비)

(단위: %)



주: 자료 출처는 OECD-WTO TiVA Database.
자료: 内閣府, 「中国輸出の高度化と米中貿易摩擦」, 재인용.

- 미·중 통상마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전기전자 부문으로, 향후 정보통신기 부문에서의 미·중 통상마찰이 격화될 경우 일본에 대한 영향이 심각해질 수 있음.¹²⁾
- 일본의 2019년 1월 대중 수출은 9,581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했으며, 특히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로 관련부품, 반도체 등이 감소했음.¹³⁾
 - * 일본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 순위(2017년 기준 금액): 반도체 등 전자부품(1조 456억 엔), 과학광학기기(9,137억 엔), 플라스틱(8,213억 엔), 자동차 부품(8,113억 엔), 반도체 등 제조장치(7,353억 엔)¹⁴⁾
- 정보통신기기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수출액 4,900억 달러 중 일본은 3.3%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음.¹⁵⁾
- 한편 미·중 통상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기가 둔화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마인드 위축, 중국의 자본지출 하락으로 인한 일본의 자본재 수출 위축, 미국시장에서 배척된 중국 제품이 제3국 시장으로 선회합에 따라 제3국 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 격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그 외에도 미·중 통상협상이 중국의 대미 수입확대 및 대미 무역관세 인하로 합의될 경우, 일본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중 통상마찰의 영향에 대하여 아시아 대양주 지역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 중 20%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일본 소재 중소기업 중 30%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변¹⁶⁾

- 일본의 아시아 대양주 지역 현지 진출 기업들은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중국 경기하락에 따른 자사 제품의 수요 감소, 미국기업에서의 부품 조달가격 상승 등 간접적인 영향이 크다고 답변
- 미·중 통상마찰의 영향에 대하여 '모르겠다'(42%) 및 '영향이 없다'(33.7%)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이 높은 이유

11) 日本経済新聞電子版(2019), 「中国の対米輸出, 日本が付加価値 総額で3.8兆円「貢献」」, (2月25日)
 12) 日本経済新聞電子版(2019), 「中国の対米輸出, 日本が付加価値 総額で3.8兆円「貢献」」, (2月25日)
 13) Ibid.
 14) 財務省貿易統計.
 15) 日本経済新聞電子版(2019), 「中国の対米輸出, 日本が付加価値 総額で3.8兆円「貢献」」, (2月25日)
 16) 아시아 대양주 지역의 일본계 기업 서베이는 일본무역진흥기구가 실시한 '2018년도 아시아·오세아니아 진출 일본계 기업 실태조사(ジェトロ(2019), 「2割弱の日系企業にマイナスの影響(総論)」(2月22日)); 일본 내 중소기업의 미·중 무역마찰의 협상에 대한 영향 조사는 일본정책금융공고 리포트(日本政策金融公庫(2019), 「中小企業の約3割が米中貿易摩擦によるマイナスの影響あり」(3月 5日) 참고.

는 아시아 대양주 지역 일본계 기업의 생산 대부분이 각국 내수용이고, 수출하는 경우에도 대일본 및 대ASEAN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 또한 대중국 수출의 비율은 7.4%(미얀마)~11.4%(라오스)에 불과함.

- 아시아 대양주의 일본계 기업 중 일부는 이미 조달·수출 경로를 ASEAN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중국의 생산 비용 상승, 환경 규제 강화 등에 의한 것으로서 온전히 미·중 통상마찰의 영향이라고 보기 힘들.
- 한편, 일본 내 중소기업 중 미·중 통상마찰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변한 분야는 ‘전기·전자 관련’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승용차 관련’(37.5%), ‘설비투자 관련’(37.4%) 순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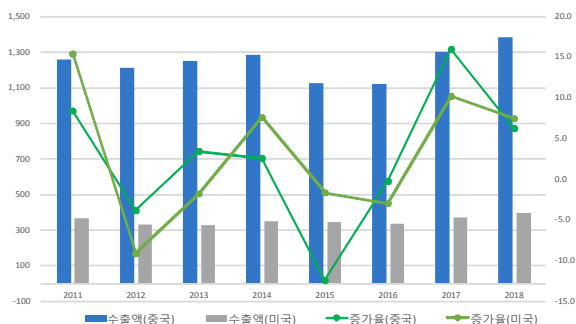
다. 대만의 반응과 대응

■ 대만정부는 미·중 간 통상마찰이 대만의 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마찰이 지속될 경우 대만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대만중앙은행은 글로벌 공급사슬 참여도가 높은 대만이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며 미·중 간 무역전이 지속 과열된다면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함.¹⁷⁾
- 2011년 TiVA 데이터 기준 대만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67.6%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무역마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유발은 대만의 수출 및 경제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함.¹⁸⁾
- 대만 경제부가 개최한 ‘미·중 무역전쟁 대책회의’에서 미·중 통상마찰이 격화될 경우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계, 전기설비, 자동차 부품, 공학기기 등 4대 중간재 품목에 대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함.¹⁹⁾
- 중국과 연계한 대만의 공급사슬 구조는 중국에서의 제품 가공 후 미국과 유럽에 판매하는 대만-중국-미국의 3각 무역 형태를 이루고 있어 미·중 통상마찰의 지속은 중국 현지진출 대만기업의 수출과 대중 반제품 수출 대만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함.

그림 7. 대만의 대중·대미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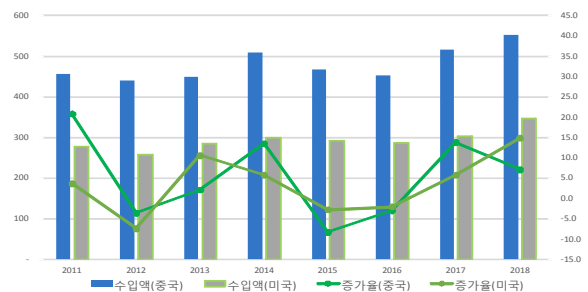
(단위: 달러, 우측 %)



주: 대중국 수출은 중국 본토와 홍콩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中華民國財政部統計處(2019).

그림 8. 대만의 대중·대미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주: 대중국 수출은 중국 본토와 홍콩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中華民國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2019).

17) 美國之音(2018), 「台灣央行行長: 美中如果爆發貿易戰 台灣衝擊最大」, (3월 26일)

18) 中央銀行(2017), 「央行理監事會後記者會參考資料」, p. 75.

19) 한국경제(2018), 「미·중 무역전쟁에 대만도 긴장... "가장 큰 손실입을 국가"」, (7월 5일)

- 미국이 화웨이(华为)뿐만 아니라, ZTE 등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중 간 마찰이 지속될 경우 중국 현지에 진출한 대만 OEM 업체들은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²⁰⁾
- 다만 5G와 AI 등 신산업의 발전으로 TSMC, 미디어텍, 델타 일렉트로닉스 등 대만기업이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스마트제조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이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²¹⁾

■ 대만정부는 미·중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및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 중임.

- 대만 경제부는 2018년 7월 ‘미·중 통상마찰 대응소조(美中貿易摩擦因應專案小組)’를 구성하여 미·중 통상마찰의 추이를 관찰하는 한편 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²²⁾
- 더불어 ‘대만기업 연합서비스센터(臺灣聯合服務中心)’를 통해 대만기업에 대한 개인상담 서비스를 비롯하여 전문법률고문 위탁 등 투자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²³⁾

■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진출 대만기업 중 일부는 생산기지를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계획 중임.²⁴⁾

- 페가트론(和碩), 관타컴퓨터(廣達電腦), 인벤틱(英業達), 위스트론(緯創), 컴팔(仁寶) 등 5대 대만전자기기 OEM 기업은 동남아, 미국, 인도, 멕시코, 대만 등 지역으로 생산라인의 확충 혹은 이전을 추진함.²⁵⁾

- * 페가트론: 약 93억 NTD를 투자해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확충, 빠르면 2019년 4월부터 정식 가동 추진
- * 관타컴퓨터: 50억~60억 NTD를 투자해 타오위안에 1만 평 규모의 공장용지를 매입하여 생산라인 확대
- * 인벤틱: 약 60억 NTD를 투자해 대만 타오위안(桃園) 공장 확충, 향후 대만, 동남아, 멕시코에서 생산할 계획
- * 위스트론: 향후 5년간 약 216억 NTD를 투입해 인도에 생산라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인도정부가 약 43억 2,000만 NTD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
- * 컴팔: 약 60억 NTD를 투자해 대만, 베트남 공장 확충을 추진

■ 2018년 12월 대만정부는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투자 장려 행동방안(歡迎台商回台投資行動方案)’을 발표하고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원활한 본국 회귀와 국내 투자를 지원

- 2019년 1월 1일 행동방안 시행 이후 총 9개 기업의 투자 신청서가 승인되었으며,²⁶⁾ 투자규모는 256억 NTD(한화 약 9,359억 원)으로 약 3,7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²⁷⁾

20) 自由時報(2019), 「5G, AI帶商機 我科技廠明年看好」, (12월 30일)

21) 위의 자료

22) 理財網(2018), 「經濟部：因應美中貿易糾紛，已於7月成立專案小組加強對臺商的協助」, (8월 29일)

23) 經濟部網站(2018), 「因應美中貿易糾紛 經濟部提醒臺商作好風險規劃」, (8월 28일)

24) 大紀元(2018), 「貿易戰全球生產線搬家 台電子廠離開大陸」, (8월 2일)

25) 經濟日報(2019), 「避開大陸 電子代工五雄大擴產」, (2월 24일)

26) 액턴 테크놀로지(智邦科技), 칭핑푸스에(慶豐富實業), 쿤타 컴퓨터(廣達電腦), 난류기업(南六企業), 와이리(崑立機電), 위룽 과학기술(宇隆科技), 야쉬 컴퓨터(亞旭電腦), 쉐더 기계(迅得機械) 및 비상장기업 1개 등 총 9개 기업임.

- 2월 14일 경제부 대만투자사무소가 승인한 △ 위룽(宇隆) 과학기술 △ 아췌(亞旭) 컴퓨터 △ 쉰더(迅得) 기계 등 3개 기업의 투자 신청안에는 각 기업의 생산설비 이전 계획이 포함²⁸⁾

- * 위룽 과학기술은 7억 NTD를 투자해 중국 주재 자동차 부품, 의료기자재, 자전거 부품 등 제품 생산설비를 타이중(台中) 향구 가공수출단지(加工出口區)로 이전할 계획
- * 아췌 컴퓨터는 5억 NTD를 투자하여 중국 수저우(蘇州)에 위치한 무선라우터 제품의 생산설비를 대만 타오위안(桃園) 위안슝(遠雄) 자유무역항구로 이전할 계획
- * 쉰더 기계는 9억 NTD를 투자하여 일부 제품의 생산설비를 대만 타오위안 양메이(楊梅) 지역으로 이전하고, 스마트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

■ 미·중 통상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은 ICT 산업 등의 산업공급사슬에서 대만이 현재 보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공급사슬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

- 다만, 미·중 통상마찰에서 충격이 우려되는 대만 전자산업의 경우 관세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품 출하지를 대만으로 바꾸거나 대만에서 실제 생산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폭스콘 등 대만기업이 대만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해도 수용가능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미국 현지로 생산거점을 이동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²⁹⁾

3. 브렉시트

가. 개요

■ 브렉시트를 앞두고 EU·영국 탈퇴협정에 대한 영국 내 강한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브렉시트가 일시적으로 연기됨에 따라 불확실성 지속³⁰⁾

- 2017년 3월 29일 영국은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2년에 걸친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하게 됨.
- 영국의 EU탈퇴에 대한 협상의 주요 의제는 1)EU탈퇴에 따른 분담금 정산, 2)역내 거주 상대방 국민의 지위, 3)영국-아일랜드 간 자유 통행 허용임.
- 2019년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영국 의회에서 인준투표를 실시했으나 1차 투표가 부결됐으며, 3월 12일 브렉시트 수정안 표결에서도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부결됨에 따라 불확실성 확대
- EU 회원국들은 3월 21일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영국 하원에서 동 브렉시트 합의문이 3월

27)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2019), 「(경제동향) 대만 본국회귀 투자 증가」. (2월 15일)

28) 위의 자료

29) 한국경제(2018), 「미·중 무역전쟁에 대만도 긴장… “가장 큰 손실입을 국가”」. (7월 5일)

30)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동희(2018), 「브렉시트 협상 현황 및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8-02; 김홍중 외(2019), 「최근 브렉시트 협상 전개과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9-02 참고.

29일 다시 부결됨에 따라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4월 10일 긴급 정상회담을 소집

- 메이 총리는 동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추가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
 - 브렉시트 기한 연기 및 영국 내부의 반 브렉시트 여론이 커짐에 따라 브렉시트의 결정 및 시점이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
-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는 브렉시트 합의의 최대 쟁점으로, 이와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경제는 물론 유럽 전반에 충격을 주고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문제와 이와 관련한 백스톱(backstop) 조항이며, 즉각적인 EU의 탈퇴를 요구하는 브렉시트 강경파 의원들이 백스톱 조항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함.
 - 백스톱 조항은 2020년 12월 브렉시트로의 전환기간까지 북아일랜드 및 영국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영국이 EU를 탈퇴할 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에 하드보더(Hard border)³¹⁾가 생김으로써 야기 될 수 있는 혼란을 완충하기 위함임.
 - 영국 중앙은행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 GDP가 최대 8%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주변 EU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국이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세계 무역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

나. 일본

- 일본정부는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영국과의 별도 FTA 및 상호승인협정 체결을 검토 중임.
- [기업 지원 체제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부결(2019. 1) 이후 일본정부는 △ 브렉시트에 대비한 정보수집 △ 자국 기업 지원 강화 △ 각 업계의 준비 촉구 등을 통해 자국기업들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브렉시트 국민투표(2016. 6) 이후부터 일본정부는 범부처 TF를 조직, 협상 동향 및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영국 주재 일본계 기업들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일본 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음.
 - [영국과의 별도 FTA] 일본정부는 영국과 양자간 FTA 협정 등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일본은 영국과의 무역에서 일본-EU EPA(2019. 2. 1 발효)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영국과 동 EPA를 기반으로 하되 일부 분야의 재협상을 실시,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임.
 - [상호승인협정] 일본정부는 상호승인협정(The Agreement on Mutual Recognition)을 영국과 별도로 맺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일본은 이미 EU와 '일본-EU 상호승인협정(2002. 1 발효)'을 체결한 바 있는데, 동 협정은 일본이 전자기기 등을 EU로 수출할 때

31) 하드보더란 국경 간 엄격한 통제로 통행 및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의미함.

필요한 적합성 인증을 EU가 아닌 일본의 지정기관에서 받아도 EU 당국이 이를 EU 역내에서 한 것으로 인정함.³²⁾

* 동 협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 전기통신기기 △ 전기제품 △ 화학품 GLP △ 의약품 GMP 등 4개 분야임.

■ 일본-EU 상호승인협정(The Agreement on Mutual Recognition between Japan and the European Community, 2002 발효)

- [전기통신기기 및 전기제품] 일본 수출기업이 일본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제품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이 EU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해짐.
- EU 역내에서 추가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수출기업의 절차상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 [화학품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일본 제조업체의 화학품을 EU에 수출할 때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소에서 채택한 시험 데이터를 EU 당국에 보내서 시장유통 허가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함(EU 당국 지정 시험소에 별도로 시험 위탁 및 승인을 받는 절차 생략).
- 단, 일본 당국은 일본 내 지정된 시험소가 적절한 시험소인지 점검할 의무가 있음.
- [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일본 의약품의 EU 수출 시 필요한 시험 데이터와 관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된 일본 제약공장이 작성한 것을 EU에서 다시 테스트하지 않아도 EU 당국이 받아들여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함(EU 당국의 재검사 절차 면제).

■ 영국 주재 일본계 기업들은 자동차 및 금융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생산 거점 이전, 사업 계획 수정 등을 결정(표 1 참고)

- [자동차] 일본의 3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혼다, 닛산은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부결(2019. 1) 이후 △ 영국 내 생산공장 폐쇄 △ 생산거점 이전 △ 공장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 검토 등의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 영국 국내 자동차 전체 생산량(연간 약 160만 대)에서 일본 자동차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72만 대)임.
- [금융] 노무라홀딩스, 미츠이스미토모은행은 영국에서 EU 단일 패스पोर्ट를 취득, 유럽 사업 거점을 런던에 두고 업무를 진행해 왔으나, 금융거점을 런던에서 유럽 대륙으로 옮기거나 대륙에 별도로 사업 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³³⁾
- EU 패스पोर्ट는 EU 국가 중 한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면 EU 역내 회원국 중 어느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의 제공 및 지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는 제도임.
- [기타] 소니는 가전 사업부의 유럽총괄회사 법인등기를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할 예정이며, 히타치제작소는 영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포기하였고, 영국 주재 일본계 화장품 기업은 독일 지사를 법인으로 격상하여 유럽 사업 거점을 런던에서 독일로 이전한다는 방침임.³⁴⁾

32) 外務省, 「日欧州共同体相互承認協定」(검색일: 2019. 2. 27).

33) みずほFG(2016), p 10.

34) 「「合意なき英離脱」に軸足 各国企業、危機管理モード」(2019), 『日本経済新聞』, (2월 4일)

표 1. 브렉시트 의회 부결 이후 일본계 기업들의 대응

분야(산업)	기업 대응 동향
자동차	· 도요타: 영국 내 공장에서의 자동차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 · 혼다: 영국 스윈던 공장을 2022년에 폐쇄(생산은 2021년 중반에 종료) · 닛산: SUV 'X-TRAIL'의 차기 모델 생산 거점을 영국 선더랜드 → 일본 큐슈로 이전 INFINITI 소형 해치백 'Q30'의 영국 내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 중국에서의 생산에 주력
금융	· 노무라홀딩스: 런던에 기반을 두고 실시하던 업무를 프랑스 파리로 이전
가전	· 소니: 일렉트로닉 사업부의 유럽총괄회사 등기를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이전(2019년 봄 예정)
원자력	· 히타치제작소: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단념(약 2,772억 엔의 손실 예상)

주: 2019년 3월 13일까지 언론에 보도되거나 해당 기업들이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일본 언론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정리.

4. 금융긴축

가. 개요

■ 2018년 미국 FRB의 기준금리 인상과 ECB의 양적완화 중단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통화 긴축이 진행되었으나 연말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및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부정적 경제전망으로 금융부문이 악화되자 일시 중단

- 미 연준은 2018년 기준금리를 네 차례 인상했으나 성장세 둔화 및 경제지표 악화로 현재 2.25~2.5% 수준으로 금리 동결했으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9년 말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³⁵⁾
- 2018년 10월 이후 미국의 주가지수는 세 차례의 금리 조정을 거치면서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에 따라 고점대비 18% 이상 하락했으나, 미 연준의 금리 동결에 따라 2019년 1분기 상승세로 전환(다우 지수: 21,792, 2018년 12월 24일 → 25,702, 2019년 3월 14일)
- ECB는 2018년 말까지 양적완화 정책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경제지표 악화 및 불확실성 확대로 2019년 말까지 기존의 금리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며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III)을 추가 도입함.

■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공급된 자본이 신흥국으로 유입됨에 따라 신흥국 금융 리스크 확대

-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2018년 초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자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및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신흥국 위험 증대 및 안전자산 선호 시현
-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한 환율 및 CDS 프리미엄의 움직임을 보면 신흥국 금융불안의 심각성은 국가별로 편차가 큼(그림 10 참고).

35) FRB(2019), "Economic projections of Federal Reserve Board members and Federal Reserve Bank presidents under their individual assessments of projected appropriate monetary policy."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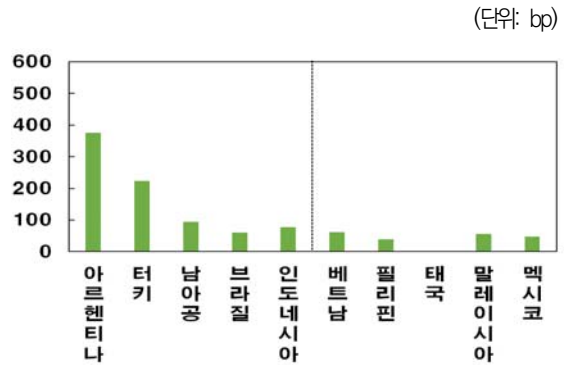
- 거시지표가 취약한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자본유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화 가치가 급락한 반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와 멕시코는 시장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

그림 9. 주요국의 증시 추이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8. 3. 15).

그림 10.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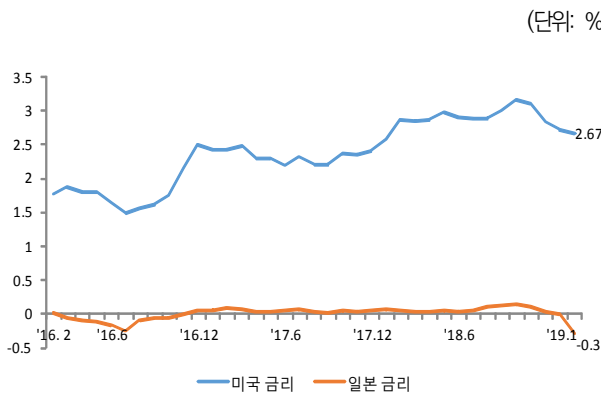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18).³⁶⁾

나. 일본의 대응

-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FRB가 연내에 금융긴축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금리를 연내에 인상하지 않는다면 이는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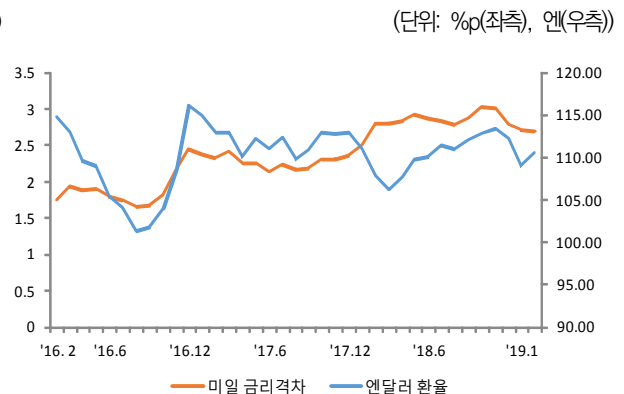
- 3월 20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대차대조표 축소 프로그램을 예상보다 이른 2019년 9월에 종료하고, 정책금리(FF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일간 장기금리 격차 축소 →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11. 미·일 장기금리 추이



주: 금리(국채 10년물)는 월간 평균금리임.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9. 3. 22)

그림 12. 미·일 금리격차와 엔달러 환율 추이



주: 금리(국채 10년물)는 월간평균이며, 환율은 월평균환율임.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9. 3. 22).

36) 한국은행(2018), 「과거 사례와 비교한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특징」, 『국제경제리뷰』.

- 2018년 10월경부터 미·일 간 장기금리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 시기부터 양국간 금리격차와 엔·달러 환율간 상관관계가 다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금리격차가 축소된다면 엔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그림 11, 그림 12 참고).

■ [일본은행의 대응] 미·일 장기금리 격차 축소에 따른 엔화 강세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책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쿠로다(黒田) 일본은행 총재는 2019년 2월 19일 미·일 간 장기금리 격차 축소에 따른 엔화 강세 가능성으로 인해 추가 금융완화정책을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 시장에서도 세계경기 둔화 및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후 내수 침체 가능성 등으로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음.³⁷⁾
-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2013년 4월부터 △ 국채 및 위험자산 매입 △ 일본은행 당좌예금에 마이너스 금리(-0.1%) 부과 △ 장·단기 금리 조절 등 강도 높은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 일본은행은 금융완화정책을 도입한 이후 엔화 강세 가능성(브렉시트, 2016. 6) 및 내수 침체(소비세율 8%로 인상, 2014. 4) 등 대내외 경제변수의 요인이 경기하강 압력으로 작용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정책을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금융완화정책을 장기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음(표 2 참고).
- 추가 금융완화 수단은 ① 장기금리 유도 목표 수준의 인하(현재 0%로 유도하고 있어서 목표 수준을 낮출 경우 마이너스가 될 전망) ② ETF 매입 확대 등으로 예상되나, 마이너스 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ETF 매입의 한계 및 주가하락의 가능성 때문에 다른 정책수단이 도입될 가능성도 존재함.

표 2.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추진 개요

	정책의 주요 내용
1차 금융완화 (2013년 4월)	· 소비자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무제한적 금융완화정책에 돌입 · 본원통화 연간 60조~70조 엔 증가, 장기국채 연간 50조 엔 매입 등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설정
2차 금융완화 (2014년 10월)	· 소비세율 인상(2014년 4월, 5% → 8%), 유가 하락 등이 인플레이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가 금융완화정책을 실시 · 본원통화 증가량 연간 80조 엔, 장기국채 매입량 연간 80조 엔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함.
3차 금융완화 (2016년 1월)	· 시중 금융기관들이 일본은행 당좌에 신규로 예치하는 금액에 -0.1% 금리를 적용 · 본원통화 증가량 및 장기국채, 기타 위험자산 매입량 등은 동일하게 유지
4차 금융완화 (2016년 7월)	· 브렉시트 국민투표(2016년 6월) 이후 발생한 엔화 강세 현상으로 추가 금융완화정책을 실시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위험자산(ETF) 매입 한도를 증대
5차 금융완화 (2016년 9월)	· 장·단기 금리의 조절, 금융정책을 본원통화에서 금리로 변경(수익률 곡선 관리) (장기금리를 0% 수준으로 유도하고, 단기금리(기준금리)를 -0.1%로 유지) ·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 기한 폐지
6차 금융완화 (2018년 7월)	· 0% 수준으로 유지하던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0.2% 수준까지 허용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를 고려한 조치임) · 국채 매입량을 연간 80조 엔 수준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전망보고서에서 삭제

자료: 日本銀行.

37)「日銀の「次の一手」を探る市場、景気の先行き警戒、強まる追加緩和観測」(2019. 3. 17), 『日本経済新聞』.

- ETF 매입은 향후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행이 보유한 주식의 손실 및 자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음.
- * 닛케이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2018년 9월 시점(평균주가 24,120.04)에서 일본은행이 매입한 ETF에는 약 7조 엔 가까운 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후 주가 하락(2018년 12월 25일 기준 19,155.74)으로 이익이 2조 엔 정도까지 축소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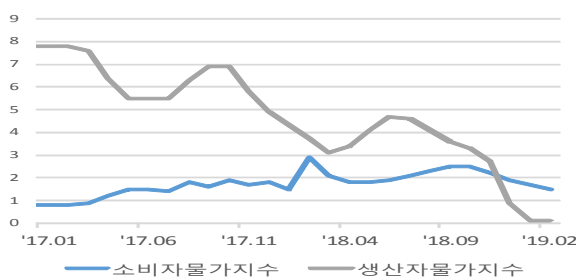
5. 중국경제 성장둔화

가. 개요

- 미·중 통상마찰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수출이 다소 둔화되었고, 중국 내 소비심리 및 기업의 투자심리 또한 위축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확대(그림 13 참고)
 - 미·중 통상마찰로 중국의 2018년 연간 수출액은 2017년 대비 5% 감소하였으며, 생산자물가지수는 2019년 2월 기준 0.1% 수준으로 2018년 6월(4.7%) 이후로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2019년 2월 1.5%로 2018년 2월(2.9%) 대비 하락, 중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경제공작회의(2018. 12. 19~21)에서 2019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
- 중국의 기업 및 지방정부,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중국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자본의 유동성이 악화될 시 중국의 경제성장을 및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 중국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성장 및 투자 중심의 경기부양을 해왔으나, 이로 인해 민간부문 부채가 크게 증가했으며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레버리징 정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경우 기업부채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그림 13. 중국의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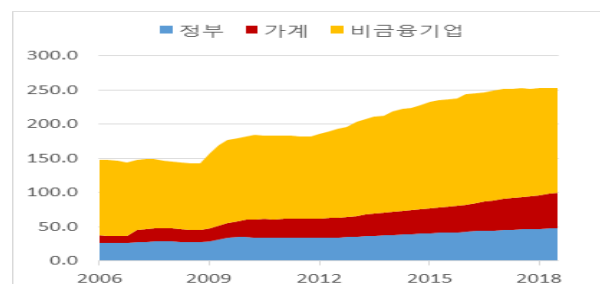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8. 4. 4).

그림 14. 중국 비금융부문 부채 수준

(단위: % of GDP)



자료: BIS, IMF WEO.

- 대미 수출 둔화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지방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 확대
- 중국 가계부채는 2013년 말 3조 3,000억 달러에서 2018년 3월 말 기준 6조 6,000억 달러로 2배 증가하였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에서 49%로 증가함(그림 14 참고).

나. 일본의 반응과 대응

■ 일본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수출과 기업실적 부문에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는 일본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수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일본의 가장 큰 교역대상국으로서, 일본은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경제 성장둔화로 인해 수출 부문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월별 대중국 수출의 경우, 2019년 2월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하였으나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각각 7.0%와 17.4%의 큰 감소폭을 보인 것에 비해 회복세는 미미한 수준이며,³⁸⁾ 정보관련재 수요 감소와 중국경제 둔화가 수출 약세의 배경이 되었음.³⁹⁾⁴⁰⁾
- [기업실적] 중국의 내수시장이 침체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기업들은 실적 부진을 겪고 있음.
- 2010년대 초반까지 중국으로의 현지법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뒤 이후 둔화추세로 전환하였으나, 2018년 일본의 해외법인 국별 구성을 보면 중국이 법인수 기준으로는 32%로 1위를 기록, 매출액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어⁴¹⁾ 여전히 대중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 현지 언론에 의하면 최근 일본기업이 높은 중국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중국의 내수 악화로 인해 일본 상장기업의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음.⁴²⁾
- [경제성장률] OECD에 의하면 중국경제둔화는 다른 지역보다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원자재 수출 국가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함.⁴³⁾
- OECD는 중국 내수증가율이 2년 동안 연간 2%p씩 하락하고 전 세계 투자 위험 프리미엄이 50bp 상승한 경우,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은 무역둔화라는 직접적 영향과 불확실성 증가라는 추가적 영향으로 인해 총 0.5%p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일본정부는 중국경제 성장둔화와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며, 일본기업들은 중국경제성장 둔화에 대해 중국 관련 사업 축소로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

38) 財務省(2019), 「平成 31年2月分貿易統計(速報)の概要」.

39) 内閣府(2019), 「茂木内閣府特命担当大臣記者会見要旨平成31年2月14日」; 内閣府(2019), 「茂木内閣府特命担当大臣記者会見要旨平成31年2月21日」.

40) 일본정부는 3월 월례경제보고에서 일본 경기에 대해 완만한 회복 추세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관련재를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수출과 생산 면에서 일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2016년 이후 3년 만에 일본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하방수정된 것임(「月例経済報告, 「景気回復」判断变えず, 3月, 表現は下方修正」(2019. 3. 21), 『日本経済新聞』).

41) 経済産業省(2018), 「米国・中国及びASEAN10における現地法人の状況」.

42) 「中国内需が揺らす企業業績・消費と投資, 依存高まる」(2019. 2. 7), 『日本経済新聞』.

43) OECD(2019), *OECD Economic Outlook and Interim Economic Outlook*.

- [정부] 일본정부는 통상문제, 해외경제동향과 정책의 불확실성, 금융자본시장의 변동과 더불어 중국경제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통상문제뿐만 아니라 과잉부채의 해소 문제도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내수 억제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넓은 관점에서 중국경제 동향을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발표함.⁴⁴⁾
- [기업] 최근 중국 내 일본기업의 사업실적이 개선되어 현지 사업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보이나, 미·중 통상마찰, 인건비 상승, 중국 정책 변화와 같은 타 요인들과 맞물려 중국경제 성장둔화 전망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추세가 다시 둔화 또는 축소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함.
- JETRO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기업의 중국 사업 축소, 이전 또는 철수의 요인으로 '비용 증가' 및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현지시장에서의 판매 감소'와 '성장 잠재력 둔화'와 같은 중국경제성장 악화와 관련된 요인들이 포함됨.⁴⁵⁾

다. 대만의 반응과 대응

■ 중국경제가 공급측 구조개혁과 미·중 통상마찰이라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성장을 둔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대만경제에 악영향 우려

- 특히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 이하로 떨어지는 뉴노멀(新常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대만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충격이 발생
- 2018년 기준 대중국(본토 및 홍콩 포함) 수출은 대만 전체 수출의 41.2%를 차지하였고, 투자에서도 대만의 전체 ODI 중 39.8%가 중국에 집중됨.
- 2018년 12월 중국 대륙 및 홍콩 지역의 수출주문액이 전년대비 10.3% 하락한 98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6년 5월 이후 최대 낙폭으로 하락함.⁴⁶⁾
- 중국은 감세, 기준금리 인하, 소비재 수입확대 등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기부양 정책 추진과 경제구조의 조정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성장속도의 둔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만중앙은행은 대외무역 불안정성 지속과 중국경제의 경기둔화 영향으로 인해 2019년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0.5%p 감소한 2.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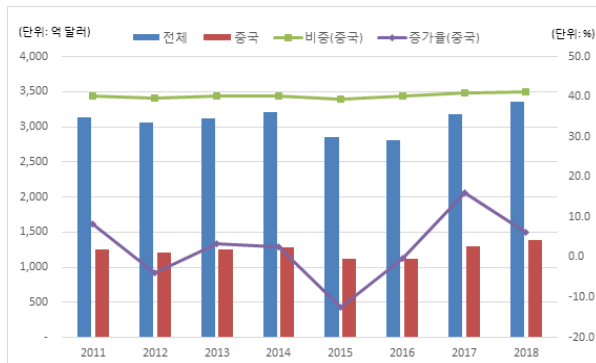
44) 内閣府(2019), 「茂木内閣府特命担当大臣記者会見要旨 平成31年2月15日」.

45) JETRO(2019), 『2018年度アジア・オセアニア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中国編—』.

46) 中時電子報(2019), 「外銷訂單 創32個月最大跌幅」. (1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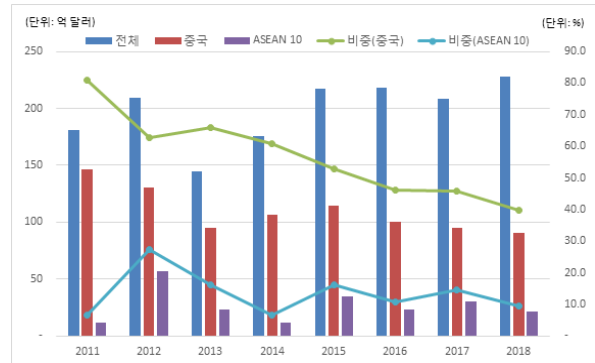
47) 經濟日報(2019), 「央行調降台灣經濟成長率至2.13% 低於主計總處預期」. (3월 21일)

그림 15. 대만의 대중국 수출 추이



자료: 中華民國經濟部統計處(2019).

그림 16. 대만의 대중국 투자 추이



자료: 中華民國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2019).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미·중 통상마찰 지속 등 대내외적 불안요소 증폭에 따라 대만기업의 대만 본국 화귀 증가와 대중국 투자 감소세가 지속됨.

- 대만 전기전자기계공동회(台灣區電機電子工業同業公會)가 발표한 ‘2018년 중국 투자 환경 및 산업발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희망도가 하락함.⁴⁸⁾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投資審議委員會)가 발표한 2018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중국 투자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나, 화교 및 외국인의 대만 투자액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⁴⁹⁾
 - 2018년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726건, 투자액은 84억 9,773만 USD로 전년대비 8.12% 감소
 - △ 미·중 통상마찰 △ 중국 투자환경 변화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대만 업체들은 중국에서 철수하여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는바, 대만의 대중국 투자 감소 초래

■ 대만정부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구조조정 및 「중국제조2025」 등 국가발전전략 추진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다원화 정책 추진을 강화할 계획임.

- 대만 경제부는 연간 시정계획에서 경제발전의 신모델 구축과 산업구조 전환 및 고도화, 혁신역량 강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외경제무역 구조 다원화 확대를 2019년 정책 추진의 비전으로 제시⁵⁰⁾하는 한편, 대만 국내산업 발전 및 대외협력정책과 연계한 대응전략을 제시함.⁵¹⁾
- 우선, 생산 및 기술 향상을 위한 무역기지로서 대만의 제조우위와 대체불가능성을 지속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5+2 산업혁신계획’⁵²⁾을 통해 대만 R&D 및 제조역량 확대, 산업체질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위치 제고를 도모함.
 - 전통산업 및 중소기업의 발전 지원, 인공지능 및 5G 등 신산업 발전과 산업고도화를 추진⁵³⁾하고 핵심기술 지도, 스마트 생산 및 마케팅 가속화, 혁신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혁신능력 제고 및 기업의 이윤창출과 노동자의 소득 증가 유도

48)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2019), 「(경제동향) 미·중 통상분쟁 관련 당지 동향」. (1월 22일)

49) 投資審議網站(2019), 「107年12月份核准僑外投資、陸資來臺投資、國外投資、對中國大陸投資統計月報」. (1월 21일)

50) 經新聞(2019), 「回應七大工商團體建言 經濟部：政府與產業拼經濟方向一致」. (2월 23일)

51) 自由時報(2019), 「7大工商團體 籲重新規劃電網」. (2월 23일)

52) 대만의 ‘5+2 산업혁신계획’은 △ 스마트기계 △ 아시아 실리콘밸리 △ 친환경에너지 △ 바이오산업 △ 국방산업 △ 신농업 △ 순환경제 분야를 포함

53) 國家發展委員會網站(2018), 「美中貿易戰對全球及我國經濟金融之影響與因應研討會開幕致詞」. (5월 25일)

- 규제완화, 혁신사업 투자환경 최적화, 민간투자 촉진 및 공공건설 참여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투자의 가속화 촉진과 함께 대만기업이 복귀 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5대 부족문제의 해결과 글로벌 투자유치 능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임.
- 대만기업이 직면한 다섯 가지 난제는 용수공급부족(缺水), 전력부족(缺電), 토지부족(缺地), 인재부족(缺才), 인력부족(缺工)임.⁵⁴⁾
- 또한, 무역과 투자에 있어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남향정책을 심화 추진하고 동남아시아 국가 및 인도에 대한 수출과 투자 확대를 독려함.
- 2016년부터 추진된 신남향정책은 수출시장의 불안변수 증대와 단일시장 의존에 따른 리스크 축소를 위해 대만 무역 및 투자시장의 다원화와 대만기업의 글로벌화 강화를 목표로 함.
- 이와 더불어 CPTPP 등 다자간 경제무역협력체 참여를 통해 대만의 경제적 위상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과 무역·투자의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 대만은 지난 2018년 CPTPP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회원국의 지지 확보를 위한 대만정부의 노력 의지를 표명⁵⁵⁾해왔고,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무역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수출 및 투자, 생산액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
- 2017년 기준 CPTPP 가입 11개국과의 교역은 대만 전체 교역의 25%에 달하며, 대외투자의 경우 전체 투자의 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CPTPP 가입을 위한 제반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양자 및 역내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

6. 요약 및 시사점

■ 일본은 IMF가 지적한 네 가지 리스크 모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바,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 계획을 수정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할 가능성도 존재

- [미·중 통상마찰] 미·중 통상마찰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나, 분쟁이 장기화되어 중국의 수출량이 감소할 경우 GVC를 통해 일본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정보통신기기 분야에서의 통상마찰이 격화될 경우 일본에의 영향이 심각해질 수 있음.
- [브렉시트] 일본정부는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영국과 FTA 및 상호승인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영국 주재 일본계 기업들은 생산 거점의 이전, 사업 계획 수정 등을 실시중임.
 - 일본정부의 기업지원 체계는 브렉시트 대비 정보수집 및 자국 기업지원 강화, 각 업계의 준비 촉구 등임.
- [금융긴축] 미국 FRB의 금융긴축 중단 및 금리동결은 미·일간 장기금리 격차 축소 및 엔화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거나 정책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54) 行政院網站(2017), 「排除企業投資五缺障礙」.

55) 經濟日報(2018), 「CPTPP正式生效 外交部：盼早日接受台灣加入」. (12월 30일)

- [중국경제 성장둔화] 일본정부는 중국의 통상 및 부채 문제를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중국경제를 모니터링중이며 일본 기업들은 중국 관련 사업 축소 검토 중
 - 경제적 타격은 수출 부진, 기업실적 악화, 불확실성 증가와 같은 직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일본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축소하는 배경에는 타 요인들과 함께 중국의 내수시장 침체와 성장을 둔화 관련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경제 성장둔화가 심화 또는 지속될 경우 중국 관련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대만은 미·중 통상마찰과 중국의 경기둔화를 대만 경제성장의 대외적 불안요소로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만정부는 △ 대응조직 구성 △ 리쇼어링 기업지원 강화 △ 산업경쟁력 제고 △ 대중국 의존도 축소 등의 대응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현지진출 대만기업은 생산기지의 제3국 이전 및 본국 회귀를 시행 혹은 검토 중

- [미·중 통상마찰] 대만정부는 미·중 간 통상마찰이 대만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마찰이 지속될 경우 대만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대만은 '미·중 통상마찰 대응소조(美中貿易摩擦因應專案小組)'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의 모니터링과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진출 대만기업의 원활한 본국 회귀와 국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투자 장려 행동방안(歡迎台商回台投資行動方案)'을 발표하여 시행함.
 -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진출 대만기업 중 일부는 동남아시아, 인도, 멕시코, 미국, 대만 등 중국 이외 지역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했거나 이전을 계획 중
- [중국경제 성장둔화] 높은 대중국경제 의존도로 인해 대만경제가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만정부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와 산업구조조정 및 「중국제조2025」 등 국가발전전략 추진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자국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다원화 정책 등을 추진
 - 대만정부는 △ '5+2 산업혁신계획'을 통한 R&D 및 제조 혁신 역량 확대 △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국내투자 가속화 △ 시장다원화를 통한 대중국 의존도 축소 △ CPTPP 참여 등 대만 국내 산업발전 및 대외협력정책과 연계한 대응전략을 추진

■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파악한 후 글로벌 경제 및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책 마련이 필요

- [미·중 통상마찰]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중국경제 하방압력 및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둔화가 우려되나 미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으로 대체되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정부의 내수진작 및 시장개방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대중 수출회복도 기대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적극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
-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EU FTA가 영국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우에 따라 한·영 FTA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일본정부처럼 상호승인협정 등 우리 기업의 대영(對英) 무역·투자 환경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긴축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특히 금융긴축 속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외환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 [중국경제 성장둔화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혹은 최악의 경제위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중(對中) 수출 및 재중(在中) 기업의 경영실태 점검, 나아가 리쇼어링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 특히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혹은 금융위기 시나리오, 즉 한국 증시 및 채권시장에서의 중국 자금 이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KIEP**